

2022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 한 민 국 정 부

2022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22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
3. 목표 및 과제현황	3
4. 조직현황	4

제2장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5
2.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현황	8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 I	9
-----------------	---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42
2.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43
3. 성과 달성도 현황	44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45
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46
6. 2022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48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50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
목 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3.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수)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세부 사업
1	1	7	18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I -1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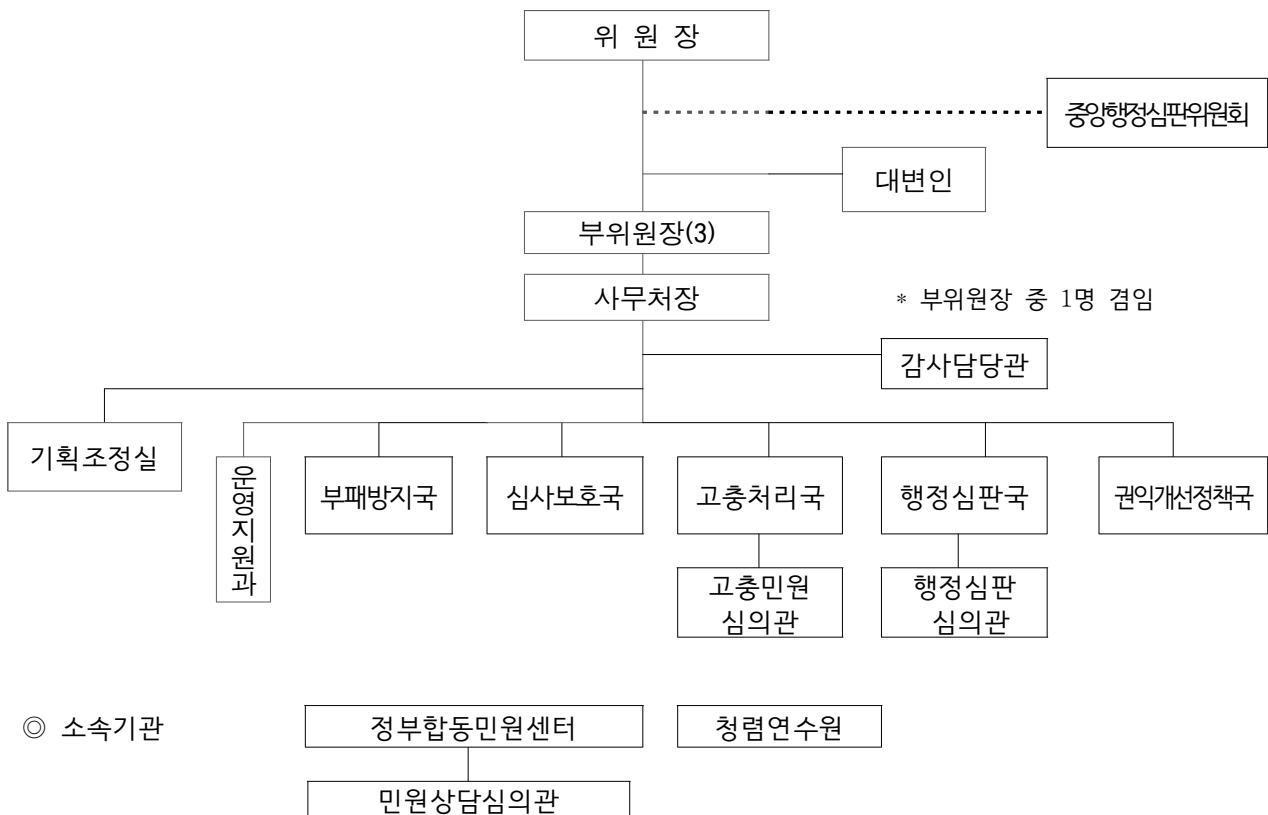
4. 조직 현황

(1)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1명 겸임), 상임위원 3인 포함 70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2과 2소속기관



(2) 인 원

(’23.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566	4	17	14	36	42	206	235	1	8	3
현원	560	4	17	12	34	49	207	227	-	7	3

1.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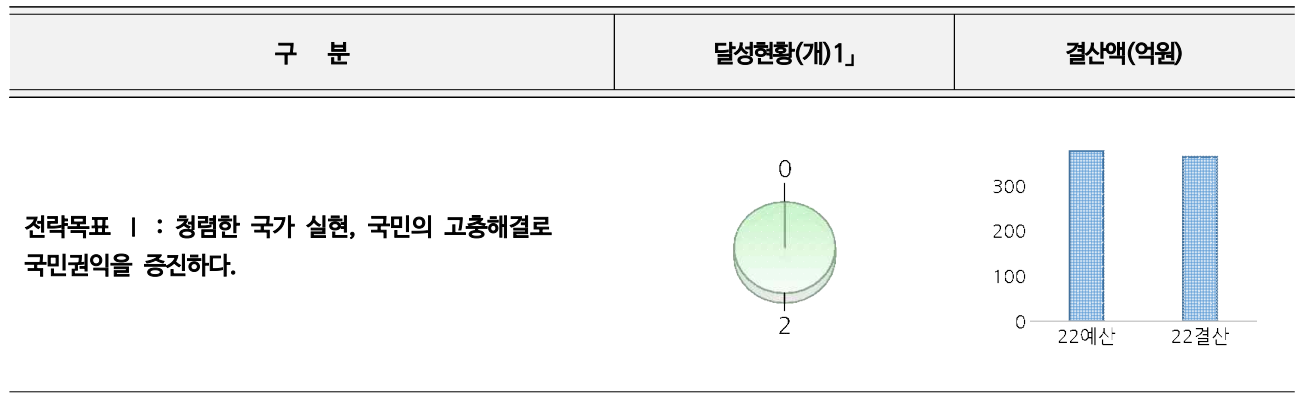
<총괄표>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1	1	2	-	-	2	98.4%
		100.0%	-	-	100.0%	

◆ **전략목표 1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성과달성 현황

- 전략목표의 성과목표는 국민권익증진이며, 성과지표 2개 미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1은 “국가청렴도(CPI)(목표치 64.0점)”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63.0점으로 미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2는 “권익행정만족도(목표치 74.5점)”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73.3점으로 미달성
- 성과지표 1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17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2년에는 63점/31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대비 1점 미달성
- 성과지표 2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등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로 만족도 특성상 기대감 충족에 한계가 존재하여 목표치 대비 1.2점 미달성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수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미만),  : 미달성(100% 미만)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21년 달성	'22년 달성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I -1)		
▪ 국가청렴도(CPI) (단위:점)	○	X
▪ 권익행정 만족도 (단위:점)	○	X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 재원배분 현황

□ 재원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358	337	379	364	100.0

□ 재원배분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 관리체계 일치화에 따른 성과목표 재조정으로 재원도 이에 맞추어 통합 배분

□ 특이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체계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성과목표도 예산체계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조직단위와 단위사업 및 관리과제를 1:1 대응체계를 갖추으로써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통한 예산 성과 책임성 확보

(2) 재원배분 추이

-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한 전략목표 설정하여 재원배분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권익증진 협력소통 및 민원 해소
-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권익구제
- 권익행정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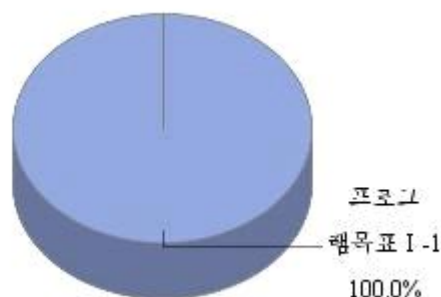
◇ 주요성과

-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 크게 개선
 - 국가청렴도(CPI) : ('22) 63점, 31위(역대 최고점)
 - 공공청렴지수(IPI) : ('21) 8.09점, 114개 국 중 18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제도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현장중심 민원 해결(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국민고충긴급대응반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 강화(행정심판 인용률 향상 및 장기 미결사건 대폭 감소 등)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개선(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기반 확대)

◇ 전략목표와 임무의 논리적 관계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따뜻한 사회 조성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 전략 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2	0 (0)

프로그램 목표 I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 프로그램 성과 담당자 :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정재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실무자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선, 044-200-7118,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박을미, 044-200-7619,
감사담당관실 이유경, 044-200-7098)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주요내용

-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국민고충의 적극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강화
-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개선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0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218	0	0	1,218	1,197	98.2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295	0	-51	1,244	1,096	88.1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 영향평가	2,572	0	0	2,572	2,517	97.9
		청렴교육및의식 확산	1,965	0	35	2,000	1,888	94.4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75	83.1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33	0	649	3,882	3,878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2,242	0	-506	1,736	1,732	99.7
		정부보조금통합신고 센터및공공재정환수 제도운영	400	0	-118	282	212	75.2
		청탁금지제도운영	507	0	-25	482	378	78.4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	0	0	0	0	0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135	0	-15	1,120	1,007	89.9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74	0	0	74	55	74.4
		종합상담창구운영	10,692	0	108	10,800	10,265	95.0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3,506	0	0	3,506	3,280	93.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877	0	51	2,928	2,796	95.5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132	0	0	132	43	32.5
		청렴권익국제교류	0	0	0	0	0	0
		청렴권익민간협력	0	0	0	0	0	0
	소계		31,938	0	128	32,066	30,419	94.9
2021	청렴권익문화 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618	0	-10	1,608	1,591	98.9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625	0	-31	1,594	1,506	94.5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 측정 및 부패 영향평가	2,520	0	-12	2,509	2,425	96.7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2,236	0	0	2,236	2,010	89.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90	0	0	90	82	90.7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582	0	959	3,541	3,540	100.0
		공익신고제도 운영	2,242	0	-996	1,246	1,077	86.4
		정부부조금통합신고 센터 및 공공재정환수 제도 운영	401	0	37	438	359	81.9
		청탁금지제도 운영	509	0	-40	469	215	45.9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	0	0	0	0	0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144	0	13	1,157	1,120	96.8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74	0	0	74	65	87.4
		종합상담창구운영	10,608	0	408	11,016	10,267	93.2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137	0	0	5,137	4,985	97.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724	0	0	3,724	3,713	99.7

구분	단위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78	0	-32	46	37	80.5
		청렴권익국제교류	401	0	-110	291	214	73.4
		청렴권익민간협력	576	0	0	576	502	87.1
	소계		35,565	0	186	35,751	33,706	94.3
2022	청렴권익문화 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941	0	0	1,941	1,913	98.6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0	0	1,331	1,310	98.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 영향평가	2,507	0	0	2,507	2,377	94.8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592	0	0	2,592	2,473	95.4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69	77.1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682	0	320	3,002	2,999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2,083	0	722	2,805	2,801	99.9
		정부보조금통합신고 센터및공공재정환수 제도운영	727	0	0	727	659	90.7
		청탁금지제도운영	347	0	-3	344	236	68.5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301	0	-5	296	286	96.5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076	0	7	1,083	1,065	98.4
	부패·고충제도개선 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97	0	0	97	90	93.0
		종합상담창구운영	11,169	0	0	11,169	10,547	94.4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640	0	0	5,640	5,584	99.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112	0	0	3,112	3,026	97.2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168	0	0	168	162	96.4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0	0	357	263	73.8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0	0	672	588	87.4
	소계		36,892	0	1,041	37,933	36,449	96.1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20년	'21년	'22년
① 국가청렴도(CPI)(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0.0	61.0	62.0	64.0
		실적	59.0	61.0	62.0	63.0
		달성률(%)	98.3	100.0	100.0	98.4
② 권익행정 만족도(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72.8	73.8	74.2	74.5
		실적	73.8	74.4	74.8	73.3
		달성률(%)	101.4	100.8	100.8	98.4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정의)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수준
- (의미) 국가청렴도는 국가별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며,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목표치 적정성) '22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19~'21년)의 평균 점수 60점에서 약 7% 상향 조정한 64점으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권익행정 만족도]

- (정의)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등을 이용한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행정심판 청구 고객, 고충민원 상담고객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성과지표임
- (목표치 적정성)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의 인용여부가 민원인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단기간 상승이 곤란하고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19~'21년)의 평균 74.3점보다 0.2점 높은 74.5점으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 측정대상기간 : '21년 ~ '23년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국제지표별로 기업경영인 대상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종합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산출
- 품질확인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WEF 등 총 9개 기관의 10개 개별 사용

[권익행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전화설문 실시
 - 측정대상기간 : '22. 11. 1. ~ '23. 10. 31.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 * (전수조사) 고충민원 중 인용(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행정심판 중 일반사건 인용재결, 상담민원, 일반민원
- 품질확인 : CATI 시스템 활용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공공기관 청렴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종합청렴도 개편

- 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첫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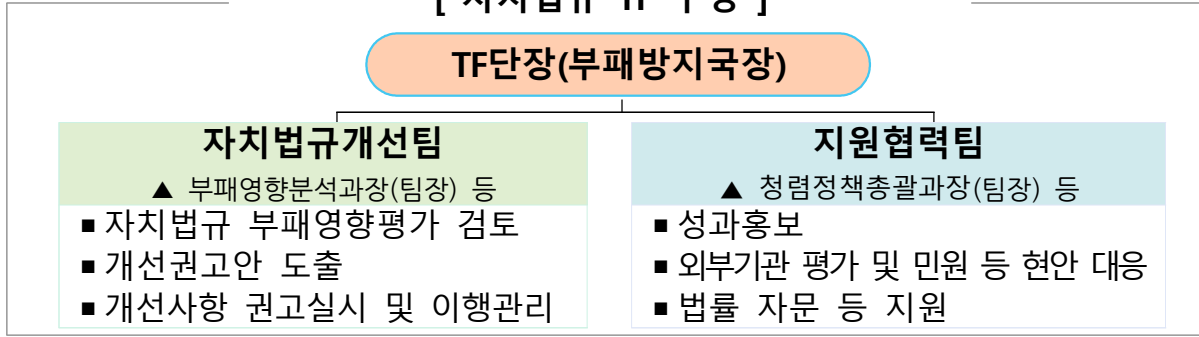


- (평가대상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도경찰청 평가 분리, 기초자치단체 전수 실시 등 전년대비 평가대상 2.1배 확대
 - * ('21년) 273개 → ('22년) 573개 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모두 평가받는 기관 기준)
- (특화모형 적용) 기관별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 여건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모형과 일반모형을 구분하여 청렴노력도 평가 실시
- 새정부 국정방향 설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평가모형 확정('22.6월) 및 평가 실시('22.8~12월)
 - (평가지표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원년임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의 평가요소로 포함

□ 사전예방적 부패 통제를 위한 자치법규 평가체계 구축

- 조례, 규칙 등 방대한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TF 구성·운영('22.7월~)

[자치법규 TF 구성]



- (자치법규개선팀) 자치법규 현황 전수조사, 지역 부패사건 등 현안 과제 발굴, 개선권고안 도출 및 이행관리 등
- (지원협력팀) 외부기관 평가, 정책 홍보, 법률 자문 등 업무 지원

□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규모가 큰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신규 도입('22.6~11월, 24개 기관)
- (청렴도 미흡기관 지원) 청렴도 미흡 기관 대상,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 적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청렴컨설팅' 운영 개선
 - (지원방향) 기관별 업무특성과 청렴시책 추진현황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운영방식) 권익위, 반부패·청렴 및 조직관리 분야 전문가, 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대안 모색 등 지원

□ 반부패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보완

-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정비) 부패신고까지 확대·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시행에 차질없도록 관련 절차 일괄 정비
 - (온라인 절차 확대·강화) 비실명 대리신고를 온라인에서도 접수하여 신고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
 - (보호신청 간소화) 비실명 대리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보호조치 신청 가능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개정('2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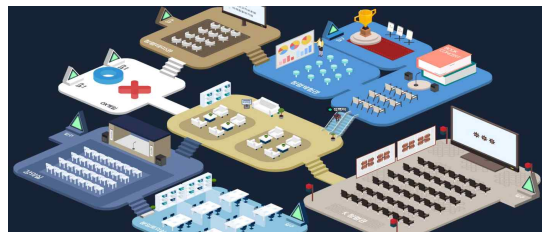
- (공정채용 관리 개선) 채용비리에 대한 공공기관 자체 예방기능 강화 및 채용실태 조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채용 관리 개선
 - (자체 예방 강화) 공정채용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한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 공정채용 관리 역량 강화
 - (조사 효율성 제고) '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필수 조사와 재량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업무부담 경감
- * 최근 3년간 전수조사 결과 주의·경고 이상 처분 미발생 기관은 '22년도 조사 유예 가능

□ 청렴교육 수요 다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 (Metaverse 활용) 온라인 교육 이수는 물론, 수요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메타버스 청렴연수원' 개원('22.8월)

'메타버스 청렴연수원' 주요내용

- ①청렴체험관, ②청렴테마관, ③K-청렴관, ④청렴콘텐츠 갤러리 등 자기주도 학습환경 제공
- ① 복콘서트·웹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청렴콘텐츠 체험
- ②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심화학습 진행
- ③ 외국공무원 대상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영문 콘텐츠 제공
- ④ 역대 공모전(2015~2022) 분야별 수상작 감상



- (학생 대상 콘텐츠 혁신)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청렴의 가치를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신규 교육매체 적극 활용
 - (모바일 콘텐츠) 게임 속 마을을 모험하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 '청렴 어드벤처' 개발·배포(6월) 및 체험형 교육자료로 활용(7월~)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렴 퀴즈, 청렴 보드게임, 청렴 샌드아트 등으로 구성된 '청렴체험교실' 실시(45개교, 5,673명 대상)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개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제도 도입 지원

- (협업체계 구축) 경영현장에 적합한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을 위해 공기업·민간기업·법무법인·학계 등 각계와 협업체계를 구축, 지속 협력
 - (경제단체 실무협의회) 공공기관과 구분되는 민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경제단체와 협력관계 구축(11.8, 실무협의회 구성)
- (CP도입 지원) 제도 도입 희망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제도 설명회·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CP 도입·운영 적극 지원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을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 CP 도입 지원 착수(7.27)
 - 청렴윤리경영 CP 기관별 컨설팅(4~5월 6개 기관, 10월 14개 기관)을 통해 미흡사항 분석, 우수사례 공유 및 보완방안 제시 등 구체적 지원 추진

[국민고충 적극 해결을 통한 국민권의 보호 강화]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 (실태조사) 66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조사
 - 운영 근거·운영형태·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면 조사(9.29~10.7)
 -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대상기관 면담 조사 실시(10.12~10.21)
- (정책연구용역) 단계별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월)
 - 서면·대면 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관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조직·행정심판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단계적 통합방안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
- (시스템 통합) 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시스템 통합 추진
 - '25년까지 123개 행정심판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연말까지 우선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총 79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 완료(~12월)
 -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의 및 설명회 실시

* 서울시, 인천시, 광주·전남·제주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제도 보완

- 행정심판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6.30)
 - (의견수렴)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 개최(2.11)
 - * 유관 행정심판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진행
(광주광역시 행심위 9.30, 대전광역시 행심위 12.8)
 - (개정안 마련)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심판의 신속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및 조문(안) 마련(6.30)
- 행정심판 업무지침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책자 발간
 -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 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의 실무지침서로 제공
 - 일반국민·행정심판 실무담당자 법전문가(변호사)를 위한 3권의 맞춤형 책자 완성(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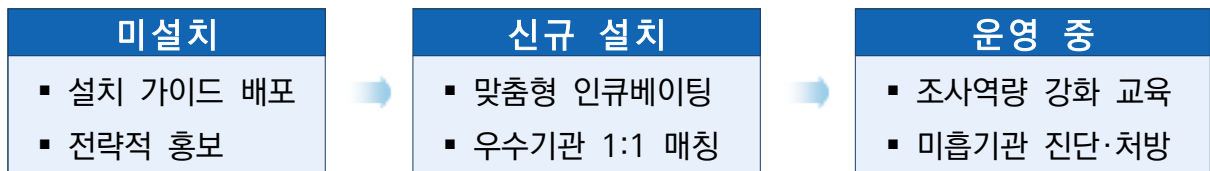
□ 상담사의 전문성 및 근무 만족도 제고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인력 배치) 상담 유형·대상 집단에 따라 필요한 다양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담관을 구성·배치함으로써 민원상담 응대 능력 제고
 - (공무원 인력) 종합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국토, 행정안전, 복지, 환경, 교육, 농림 등) 파견인력 중심으로 상담
 - (민간 전문가 인력) 기존에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은 방문 위주의 상담을 하였으나, 온라인 민원상담도 연계하여 상담 추진
- (근무환경 개선) 상담사를 위한 사무공간 확장 및 맞춤형 교육 제공
 - 정부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상담사를 위한 공간 용도로 250㎡를 추가 배정받아 사무공간, 모성보건실 확장, 1인 휴게실 신설
 - 국민콜110 상담사 선호도를 반영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시민고충처리위 협업) 지역 고충민원의 신속·효율적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확산 및 운영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고충처리위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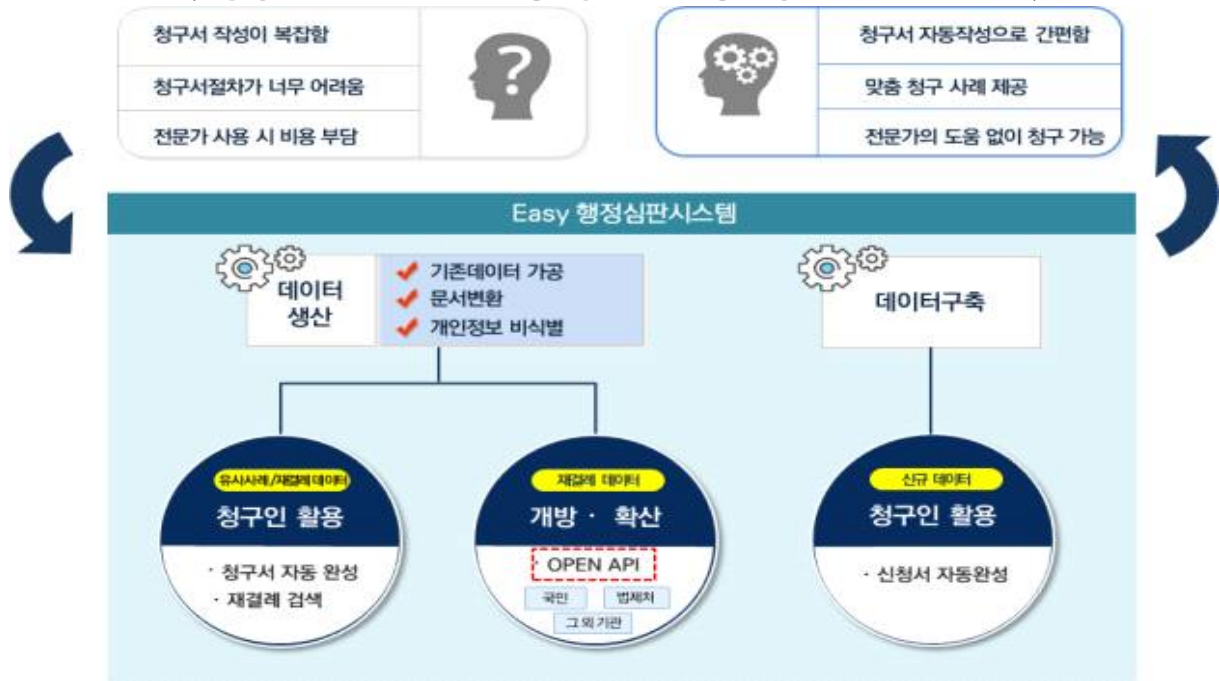
- (운영 내실화) 권역별 세미나·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별 컨설팅·교육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기법을 전수
 - * 전남권 시민고충처리위 세미나(6.17),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7.18),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 세미나(9.2), 시민고충처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11.13)
- (국방부 협업) 국군장병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국방음부즈만 홍보 강화
 - 권익위가 군 입영 장병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방부는 내부 인트라넷 탑재 및 각 부대 교육에 활용(26,344건 접속)
 - * 현역장병 권익 강화를 위한 권익위-국방부 업무협약 체결('21.12.29)
 - * (포스터·웹배너) 총 11,308부 제작, 국방부와 중대급 이하 예하 부대 등 총 914개 기관 배포·게시('22.6월~8월)

- (법제처 협업)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고충민원 의결서 및 결정례 개방 서비스’를 개통(7.22)하여 고충민원 해결사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고충민원 의결서(시정권고·의견표명), 불인용 결정례(안내·각하) 등 300건 등재(‘22.9월~)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에서 운영하며 모든 법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판례,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례(‘10년~)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 평균 80만 명이 방문

□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심판·고충상담 업무 지능화

- (기술 혁신)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 및 맞춤형 사례 제공을 위한 ‘EASY 행정심판’ 리걸테크(LegalTech)* 시스템 구축 추진
- * 법과 IT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 행정심판 빅데이터 활용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념도 〉



- (신기술 도입) 행정심판 메타버스(Metaverse) 체험·홍보관 설치 및 운영
 -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진행절차, 중앙행정심의 심리과정 등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 상담관, 체험관(심판정, 모의행정심판), 이벤트관(OX퀴즈 등), 교육관(행정심판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 구성



- (시스템 개선) 행정심판 송달업무 온라인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반 마련
* '22년 e-그린 우편서비스와 온라인 행정심판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23년 단순안내문서를 대상으로 우선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안·시행문 순으로 추진

- (AI 활용) 정형화되거나 빈발유형의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비서 챗봇'이 답변을 제공하는 자동상담 서비스(챗봇 상담) 시행(5월~)

- 110콜 폭증 시 정형화된 단순 상담을 챗봇이 수행함으로써 상담사 업무부담 경감,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이용 편의성도 제고



* 행안부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 공통 인프라(HW, SW) 활용

□ 보다 공정·편리하게 국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구축

- (대통령실 국민제안창구 구축·지원)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통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에 접수되는 국민제안을 정책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정책 TF 구성·운영(7.18~)
- (시스템 보완)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에 국민패널 참여 안건 상시 검색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 (국민패널 보완·확대)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설문조사의 대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패널의 참여연령과 인원을 확대하는 이벤트 실시(3.30~5.31)

- 이벤트 기간 중 203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민간 '공모' 사이트를 활용해 홍보

- 특히, 5~60대층 저조한 패널 수를 늘리고자 중·장년층 관심 분야 설문과 병행 추진

* 이벤트 기간 중 5,586명이 신규 가입

< 패널 현황 > 전국에 거주하는 총 16,260명 구성·운영('22.12.31 기준)



- (미래세대 정책참여 활성화) 정부 정책수립과 행정개선에 청소년과 청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개선
 - 안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고등학생 부문과 청년·대학생 부문으로 구분하고,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팀(2인 이상) 단위로 변경
 -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본선 진출작(8개팀)에 대해 숙성·보완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활동경비 지원
 -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 선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민원처리 후에도 민원인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정책정보를 자동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정책정보 맞춤서비스’ 구축 및 운영(‘22.2~ 약 36,000명 활용 중)

□ 기관협업을 통한 민원빅데이터 활용가치 창출

- (부처협업)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원분석으로 분석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방안 도출
- (국회협업) 지역별 민원(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을 분석,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민원지도」 서비스 개발·홍보(‘22.5월, 국회사무처 협업)
 - 권익위-국회사무처 MOU 체결(3월) 이후 245개 지자체별 TOP10 이슈에 대한 분석자료를 국회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개방(5월)
 - * 활용성 증대를 위한 브로셔·동영상 제작 배포(6월)
 - 국회사무처는 각 정당 및 의원실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고하도록 민원지도 안내(6월~)
- (학계협업) 민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민원 데이터를 포스텍에 제공, 민원 데이터 활용 공동 연구(‘22.4월~’23.3월)
 - 연구기관과 함께 국민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방안을 도출

2) 사업효과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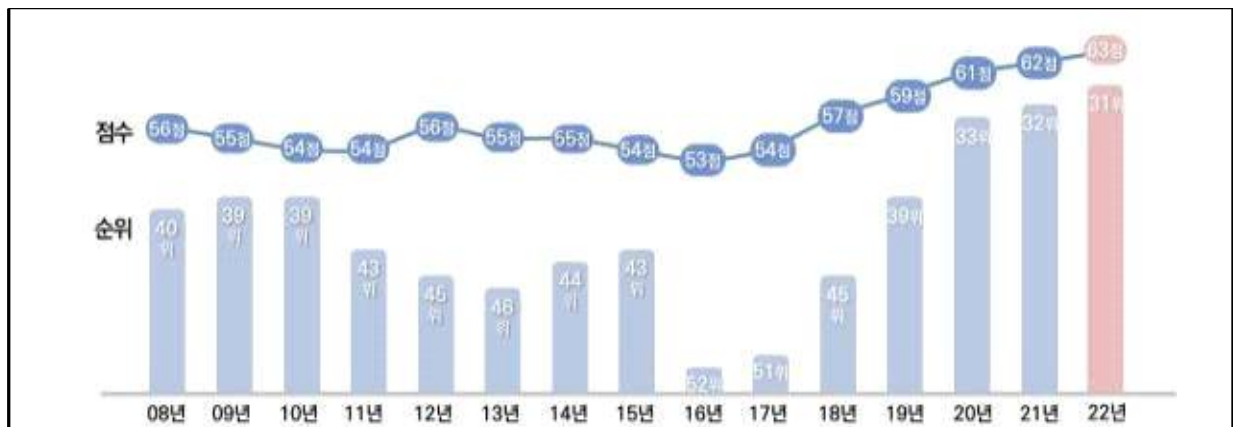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 (역대 최고 CPI) 매년 초에 발표되는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점수 기록
 - 특히, 최근 6년간 국가청렴도(CPI)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반부패 정책 추진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속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변화 추이 >



□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반부패·공정 법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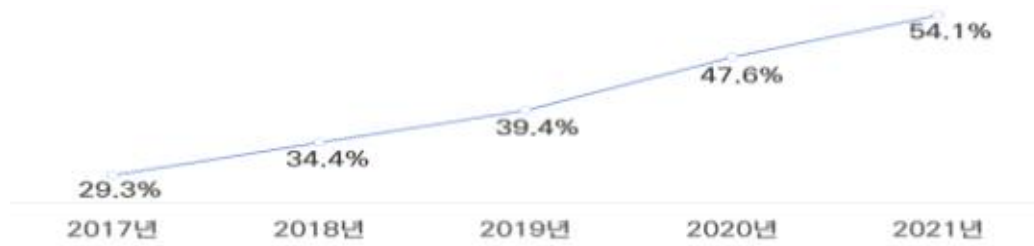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법 제정('21.5.) 이후 법 시행('22.5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정착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22.2월), ②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22.4월)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세부규정을 제정
 - 또한, 법 적용 대상 200만명 공직자 및 전 국민이 법 시행의 의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 추진
- (청탁금지법 규범력 확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등을 추가하여 규범력 강화('22.6월 시행)

-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자료 열람 및 이첩금지 명시 등 신고자 비밀 보장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22.6월 시행령 개정)
-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개선) '22년 1,406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총 324건의 개선안 발굴·권고
 - 또한, 220개 기타공공기관의 21,328개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과제 235개를 발굴하고, 2,250건의 개선사항 권고
-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월 시행)으로 부패신고 관련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행정처분 감경·면제 요구 근거 신설
 - 구조금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 제도를 도입
 - 또한, 시행령을 개정('22.7월)하여 부패신고를 통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 (개정 전) 원상회복 관련 쟁송 → (개정 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체계 정비)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당사자에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 의무화 규정 신설
 - 취업제한대상 중 '공공기관'에 국·공립학교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 또한, 취업제한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구체화하고, 비위면직자 자료 누락 위험성 보완('22.2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 '22.7월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개정,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개정)

□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채용비리 근절)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위자 징계·처벌,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 실시('17년~, 총 5회)
 -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체감도 향상
- * (채용비위 적발) 제1차('18년) 338건 → 제2차('19년) 182건 → 제3차('20년) 83건 → 제4차('21년) 76건 → 제5차('22년) 47건으로 개선 추세
 - (피해자 구제) 제1차 3,255명, 제2차 49명, 제3차 151명, 제4차 75명, 제5차 48(잠정) 재응시 기회 부여 등
 - (제도개선)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우리 사회의 취업이 공정하다고 답변한 비율]



* 자료 : '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8,000명 대상), 한국행정연구원, '22.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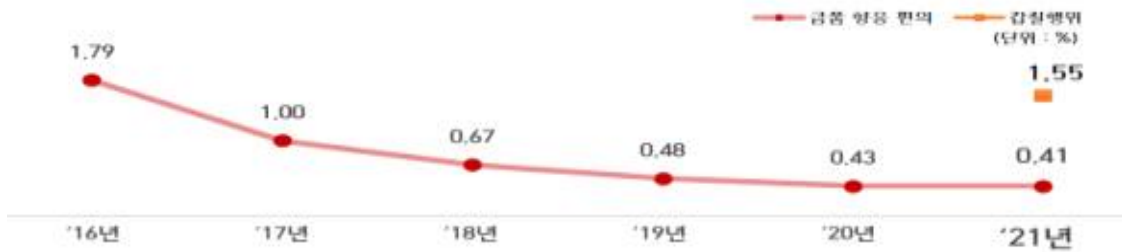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21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 실태 점검결과, 공공재정 총예산 221.2조 중 957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9억 원 부과 * '20년 454억원 환수 대비 2.1배 증가

[참고 : '21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 환수 : (중앙) 658억 원(68.8%), (지방) 294억 원(30.7%), (교육) 5억 원(0.5%)
 - 제재부가금 : (중앙) 90억 원(91.3%), (지방) 7억 원(7.4%), (교육) 1억 원(1.3%)
-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 환수 : (허위) 216.7억 원(22.6%), (과다) 57.6억 원(6%), (목적외) 22.4억 원(2.3%), (오지급) 660.8억 원(69%)
 - 제재부가금 : (허위) 90.7억 원(92.6%), (과다) 1.2억 원(1.2%), (목적외) 6억 원(6.1%)
- 분야별 환수 실적
 - 사회복지 849억 원(88.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2.8억 원(5.5%) 등

- '21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22.3~7월)을 통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권고('22.8월)
-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사건 244건을 처리하고, 회사 불법도청 신고자 해고 취소, 사립대 회계비리 등 신고자 면직 취소 등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60.0%의 보호조치 인용률 달성
 - 또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하는 등의 법 위반자에 대하여 12건의 검·경 고발,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법인 등에 1억 7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신고자 보·포상금 및 구조금 약 61억원 지급
- (부정청탁 행위 근절)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22.3~5월), '21년 총 12,12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1,463명 제재
 -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으로 공직사회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단위 : %)]



* 자료 : '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권익위

- (집중신고기간 운영) '22년 대선(3.9.) 등 선거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청 등 공직자 행위규범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22.2~4월)을 통해 총 355건의 신고 접수
 -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공익침해해위 집중신고('22.5월),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22.11월),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의 부패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공계약부패행위 집중신고('22.3~6월) 운영

□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향상 및 대내외 인식도 제고

- (청렴교육 확대) 효과적인 부패방지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 강사지원, 각급기관 부패방지교육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 ※ 의무교육 이수 공직자 수 : ('19) 157만명 → ('20) 162만명 → ('21) 174만명
 - 청탁금지법('16.9월), 공공재정환수법('20.1월), 이해충돌방지법('22.5월)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정착을 위한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효과성 제고

교육 운영	◆ 공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교육 실시로 공직자 6,836명 교육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로 공직자 116,269명 교육 ◆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로 교육운영 내실화 및 교육효과성 제고 * 교육인원 : '22년 81,119명 ◆ 학생, 일반국민, 외국공무원 등 전방위적 교육 확대
교육 지원	◆ 청렴교육강사 양성을 통한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 * 강사양성 : '22년 1,437명 ◆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총 10종)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22.6월)하고, 20개 공공기관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컨설팅, 심사 등을 통해 CP운영 지원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개요

- (체계) 5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5개 지표, 45개 세부지표, 190개 준수사항
- (내용)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 등 대분류별로 자체적인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 ※ 고위직의 약속과 헌신, CP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권한 부여,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 리스크 경감조치, 청렴윤리경영 교육, 모니터링·개선 등

- 7개 지역별·9개 분야별 사회 협약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지원·독려하여,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전년 대비 9.0%p 향상(‘21년 평균 64.4% → ‘22년 평균 73.4%)

2022년 청렴사회협약 주요 이행 사례

- ◇ (전라북도 협약/ 18개 기관·단체)
민관이 함께하는 제7회 청렴누리문화제 개최 등 이해충돌방지 서약으로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협약이행과제의 정책 체감도(‘22.10)
: 97.3% (410명 대상 설문조사)



- ◇ (강원도 협약/ 25개 기관·단체)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실천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협약이행과제의 정책 체감도(‘22.10)
: 85.5% (318명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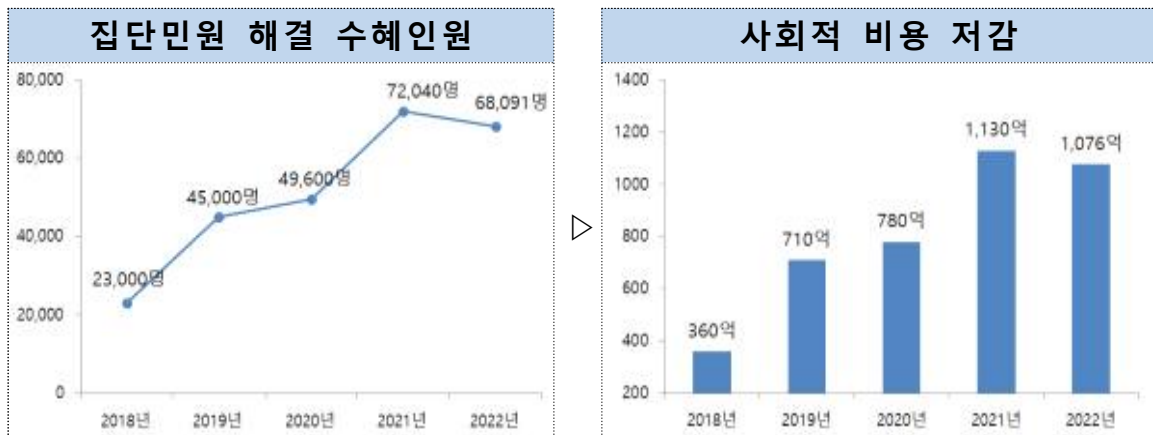
- (K-청렴 확산) G20 정상회의 부속서에 한국의 반부패 국민참여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소개(‘22.11월)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등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자 보호 강화 등 한국의 반부패 추진 성과 발표
- 특히, UNDP와 협업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에 공유·확산

[국민고충 적극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강화]

□ 국민고충 해결

- (적극적 국민고충 해소) '22년 총 37,542건(유사 반복 제외 9,406건)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2,421건을 인용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강화
-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도 중점 관리하고 '22년 총 202건을 조정·합의 해결하여 68,091여 명의 주민 숙원 해소
- *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아닌 사안이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 ('18) 238건 → ('19) 316건 → ('20) 433건 → ('21) 367건 → ('22) 367건

< 집단민원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 >



* 사회적 비용 추산 근거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2010)결과,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최소 82조원(국민 1인당 158만원)으로 추정"

- (소외·취약계층 고충 집중 해소) 도서·벽지 등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 1,929건 상담·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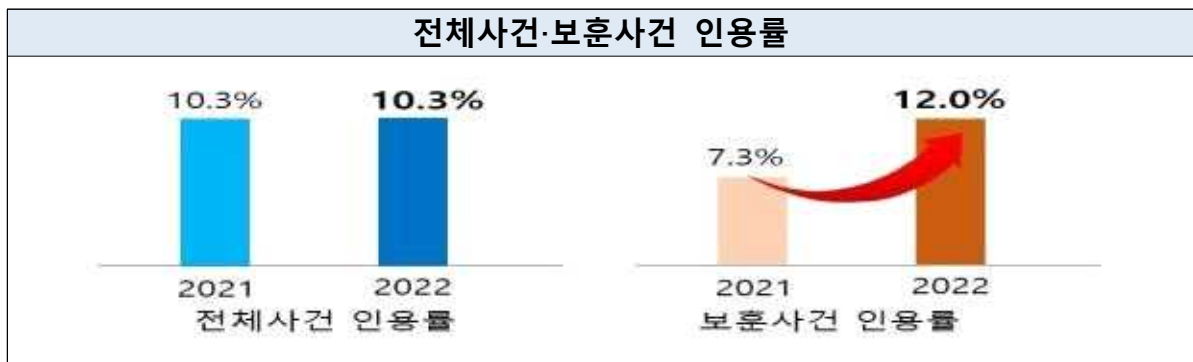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경제적 애로사항 해소

* '22년 특별컨설팅을 총 13회 운영하여 의견표명 3건 등 11건 해결, 2건 진행 중

-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 분야별 민원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 콜상담사,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상담관풀 운영
- 각 채널별 상담사례 분석 및 상담관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만족도 제고
 - * '22년도 온라인 민원상담 처리는 총 31,868건, 이 중 87.1% 상담 해결
 - * '22년도 국민콜110 고객만족도는 9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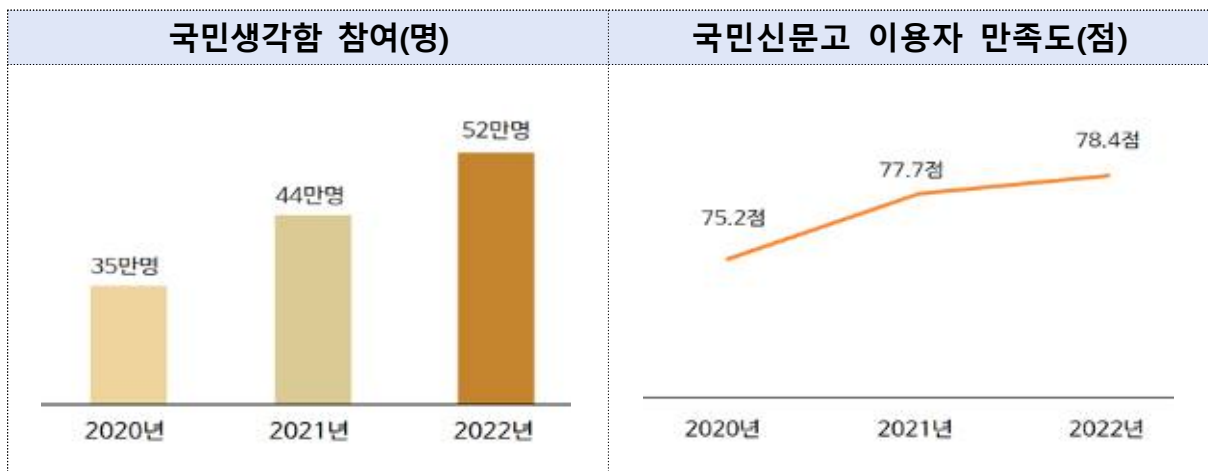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고객만족도	88.9점	87.5점	88.2점	90.1점	90.3점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 '22년 1,468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리
 - 전체사건 인용률은 전년도 10.3%와 동일한 10.3%이고, 보훈사건 인용률은 전년도 7.3% 대비 4.7%p 상승한 12.0% 기록



□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참여 확대)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소관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숙성시켜 총 36건을 정부 정책으로 완성
- 국민참여 정책환류 프로세스의 선순환으로 전년 대비, 국민생각함 참여는 18.2% 증가하였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는 0.7점 상승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주요 정책, 사회 현안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
- 지역빈발 민원 해소 등 사회 현안, 주요 정책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이슈를 적시에 해결 지원

< 주요 사례 >

시기	주 제	분석대상
5월	전국 지역별 민원(민원지도)	2021년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400만여건
8월	중학교 입학배정	2021년 5,036건
9월	전통시장	2020 ~ 2022년 3월 코로나19 12,000여건

< 주요 사례 >

① [민원지도 서비스]

- (분석) 지역별 민원(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400만여건)을 분석,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빅데이터 기반 민원지도」서비스 개발하여 한눈에 보는 빅데이터 게시
- (활용) 국회사무처와 사무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정당 및 의원실에서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고하도록 민원지도 안내

민원지도 서비스(22.5.~)



민원지도 서비스 언론보도



민원지도 홍보자료 제작



② [중학교 입학배정 민원분석]

- (분석)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중학교 입학 배정관련 5,036건 민원을 분석하여 관련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방안 도출하여 교육부 통보(8.8.)
- (활용) 교육부는 적극행정 방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협의회 개최, 시도교육청에 전파(8.19, 8.26, 8.30), 우수제도개선사례집 발간(~12월)

중학교 배정 민원분석결과 공유(8.8)



교육청 업무담당자 권역별 간담회(8.19)



② [전통시장 민원분석]

- ▲(분석)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기간 2020 ~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총 12,000건의 전통시장 민원 분석
- ▲ 이에 코로나19 기간에 접수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2년 3개월, 12,001건)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통보(9.2. 중기부 등)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생활 속 국민 불편사항 및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등을 발굴하여 '22년 총 25건의 제도개선 권고

<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주요 사례 ① : 지방세 납부 관련 불편 개선	생활 속 불편
(문제점) 세금 납부 방법이 다양화되었으나, 오히려 국민이 지방세 고지·송달을 알지 못해 국민 불편 초래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발생 ☞ (개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자송달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관련 세부기준 마련(3.14)	
주요 사례 ② :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개선	취약계층 보호
(문제점) 국가보훈대상 유족 중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등을 지급 받아 생계곤란 유족이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발생 ☞ (개선)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유족 수 1명 기준을 개선해 생활수준 고려 및 균등분할 지급 등으로 생계곤란 유족 보호 강화(6.13)	
주요 사례 ③ : 노인학대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문제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현장조사 지연으로 인해 노인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개선) 노인학대의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 실시 기준 마련 등(11.21)	

- (적극행정국민신청 권고의견 제시) '22년 총 3,267건의 국민신청을 접수받아 215건의 권고의견을 소관 행정기관에 제시
- ▲청년시대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국민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주요 적극행정국민신청 권고의견에 따른 개선 사례 >

주요 사례 1 :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병원 진료에 따른 약제비 부담 개선

청년세대 불공정 해소

- (상황) 진료 미종결 전역자의 진료는 전역 후 6개월까지 가능하나, 원외 처방전 발행으로 약제비를 환자가 부담
- (개선) 군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 복귀하도록 약제비 지원근거 마련,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국방부, 2.21.)
- ☞ 연간 약 7~8백 건의 약제비 소요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주요 사례 2 : 공익사업 토지 수용절차 진행상황 안내 강화

국민 생활 속 불편 개선

- (상황)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제때 안내문을 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이의신청 등 기회를 놓쳐 민원 발생
- (개선)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 문자메시지 안내 실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5.25)
- ☞ 사업 진행상황 안내 강화를 통한 사업 수용성 제고 및 국민권익을 두텁게 보호

주요 사례 3 : 고장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관리 강화

국민 생활 속 불편 개선

- (상황)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음
- (개선) 전국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신호기에 대해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추가 설치 필요장소 발굴 개선(경찰청, 7.26)
- ☞ 전국 약 3,400여 개의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에 대한 점검·관리 개선

주요 사례 4 : 보도 중앙에 위치한 전주 이설

국민 생활 속 불편 개선

- (상황)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보도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 전주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 (개선) 관계기관과 도로점용 협의, 신속히 전주이설(한국전력공사, 10.24)
- ☞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주요 사례 5 : 임대차계약신고 사전안내 강화 등 민간임대등록제도 개선

국민불편사항 신속조치

- (상황)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오인해 임대차계약신고 누락 및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 빈발
- (개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신고 사전안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정보 제공 기능 고도화, 일선 지차체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권고(국토부, 7.26.)
- ☞ 신고사항 사전 안내 강화로 과태료 분쟁 등 빈발민원 사전 예방

주요 사례 6 : 수입신고 의무 관련 법령 정비

국민불편사항 신속조치

- (상황) 법령이 불명확하여 신고 없이 수입한 제빙기에 관한 제재 사례 민원빈발
- (개선)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 안내 및 홍보를 강화, 수입신고 누락으로 인한 제재 사례분석 통해 법령 개정 권고(식약처·관세청, 8.19)
- ☞ 기업의 입장에서 불명확한 법령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민원 예방

- (생활 속 빈발민원의 근원적 제거) 생활불편·안전, 민생경제 등 일상 속에서 빈발·반복되는 고충민원 과제 10개를 발굴하여 종합적 처방안 권고

< 2022년 빈발민원 기획조사 사례 >

- 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국방부·보훈처와 정부 합동조사 실시)
- ②交通安全 확보를 위한 수목 정비 사업 (전국 시·군·구와 일선 경찰청과 협업)
- ③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④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 ⑤ 주거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기준 개선방안 마련
- ⑥ 자산 매입 후 임대방식의 가격산정 기준 개선
- ⑦ 고소·고발 사건 수사 장기 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⑧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 ⑨ 도시·군 관리계획 의견 청취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⑩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행정심판 ONE-STOP 서비스 제공 추진) '22년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총 79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 완료('25년 123개 행정심판 전 기관 통합 목표)

《 국정과제 주요 내용》

- (심판기관 통합) 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통합 추진
 - 각 행정심판별 의사결정 구조, 사건처리·인력 운용 현황, 통합의 장·단점, 비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대상을 선별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3년)
- (온라인 시스템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청구, 진행 상황 확인, 사건처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25.12월)

□ 적극적인 이행관리

-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관리) 전담 점검반(3명) 편성, 서면 및 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이행실태 점검, 수용 협력 전략회의, 언론보도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권고 수용률 91.0% 달성
- 불수용 또는 수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던 24건이 수용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고충이 즉시 해결되거나 조속한 시일 내 구제 예정

수용으로 전환된 주요 사례	수용 협력 전략회의(11.23.)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거부 ➡ (개선) 제도개선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 공단 직원 실수로 근로자로 등재해 징수한 보험료 반환을 시효 경과를 이유로 거부 ➡ (개선) 보험료 반환을 긍정적으로 검토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체감 효과가 큰 제도개선 사례 100선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각 부처의 이행 유도
 - 미이행 과제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맞춤형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전년대비 이행률 향상(76.6% → 77.2%)

['22년 제도개선 이행완료 주요사례]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방안('21.9. 권고)

- (주요내용)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 준수,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아동급식제도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

기존 급식대상아동의 학사일정 변동(임시휴교·재택학습 등) 발생 시 지자체가 적시 결식지원 곤란



개선 학사일정 변경 시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 및 지자체로 통보하여, 변동된 학사일정으로 인한 아동 결식 예방

- (적극행정국민신청 구현 노력도 제고)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검토하여 적극행정 국민신청 중 총 94건의 민원·제안을 반영·개선

< 적극행정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현황(2022. 10. 31.기준) >

구분	전체 현황		기관별 현황				
	반영 건수	기관당 평균	전체 기관3건 이상	2건	1건	0건	
전체	94	0.2	501	7	9	47	438
중앙행정기관	15	0.3	46	1	4	3	38
광역자치단체	16	0.9	17	2	1	6	8
기초자치단체	45	0.2	226	2	3	31	190
교육청	7	0.4	17	1	0	3	13
공직유관단체	11	0.1	195	1	1	4	189

- (민원데이터 분석자료 활용점검) 매주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한 「국민의 소리」를 1,191개 기관·459개 시민단체에 제공

- 매주 민원 사례 중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 불편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반기별로 활용 여부를 점검

※ '국민불편 사례' 45건 중 39건의 사례가 법·규정,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불편 사례' 조치 주요 사례

■ 장마철 안전 및 등산사고 방지(국민의 소리 '22.6.8)

- 배수시설 점검·정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토사붕괴 및 낙석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 집중호우(태풍)에 의한 사면침식·침하 등 산림재해 예방, 등산객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8월)

급경사지 점검('22.6월 산림청)



■ 여주시 상수도 수질관리 요구(국민의 소리 '22.9.21)

- 휴탕물 유입으로 하루만 지나도 수도물 필터가 막히고 주민 질병 유발하고 있으니, 수질 검사, 개선대책 요구

⇒ 원인조사·수질조사, 상수도관 필터·정밀여과장치·이물질 포집기 설치 등 개선방안 조치(~1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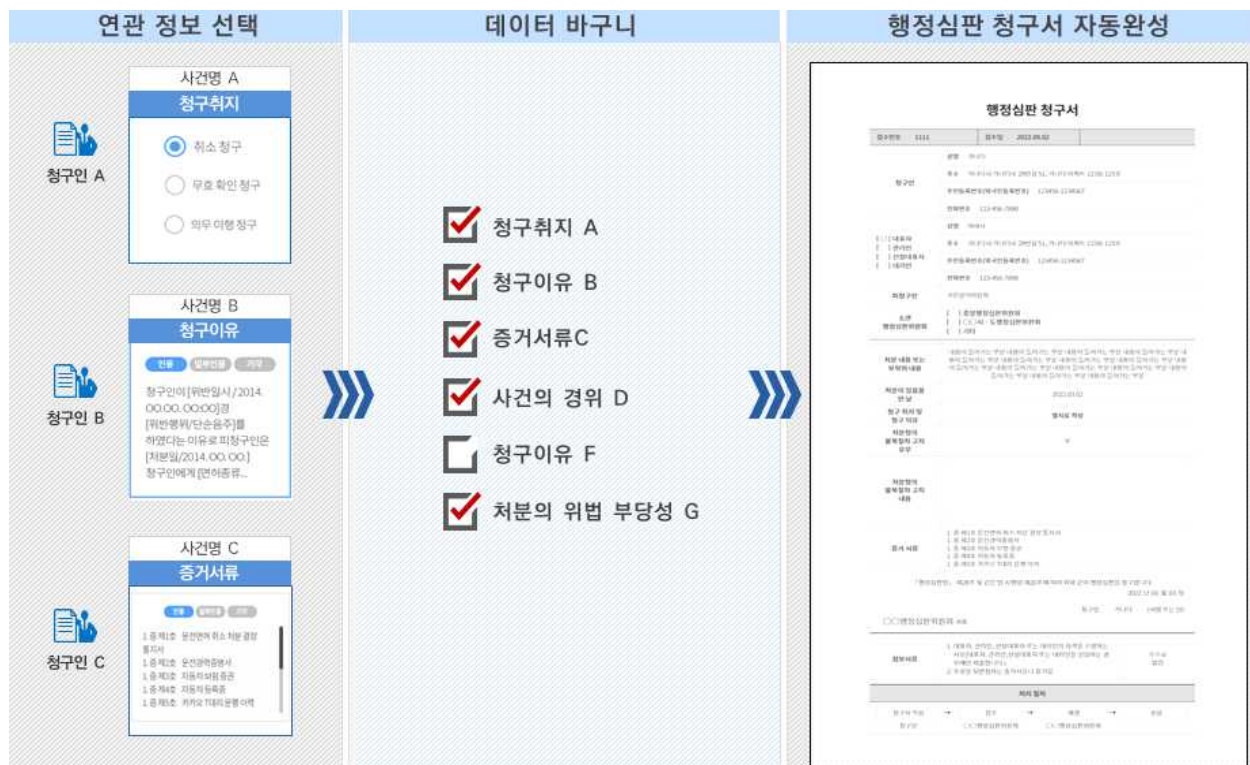


□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이지(EASY) 행정심판’ 리걸테크(LegalTech) 시스템 구축·개시(12월 서비스 개시)를 통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 개선
-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법정 서류(청구서와 30여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
-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간단한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무엇을 주장하고(청구인 주장), 무엇을 준비해야(증빙자료) 하는지 등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Easy) 행정심판’ 플랫폼 제공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개념도 >



➡ ‘행안부 주관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기관 중 1위 달성)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성과지표(사업)	자료명
1	행정심판 운영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1회 문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아

3) 미달성/초과달성 프로그램 원인분석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17년부터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 정치, 경제, 문화 등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매우 적극적으로 상향하여 설정(19년부터 21년까지의 평균 점수 60점에서 약 7% 상향)
- (사업관리의 적정성)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소통기제 다각화로 CPI 평가기관에 대한 현지방문 및 정책홍보·설명(2회, 5개 기관)을 하였고,
 - 기업 옴부즈만 주관으로 주한 외국 상공인 단체 간담회 개최(7회) 및 CPI 개별지수별 애널리스트·전문가 대상 정책홍보를 다수 실시하여,
 -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성적인 '21년도 62점(32위)을 초과한 '22년도 63점(31위)으로 역대 최고 점수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음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국가청렴도에서 하락한 세부지수는 법치주의지수(WJP), 민주주의지수(V-DEM), 국가경쟁력지수(WEF)임
 - 이들 지수는 각각 공무원의 공적지위 악용 정도, 행정·입법·사법 등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 공적기금의 유용 정도를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음
 - 조사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부패 스캔들이 한국에 대한 기업 경영인·전문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권익행정 만족도]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의 만족도는 지속적인 상승이 어려움에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최근 3년간의 평균 74.3점보다 상향)
- (사업관리의 적정성) 만족도가 상승한 고충민원은 인용률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21.1% → 25.7%)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단축(22일 → 21일)되었으나

- 만족도가 하락한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21년에 비해 하락(10.3% → 8.6%) 하고, 처리기간(90일) 도과 재결 건수의 증가(4,165건 → 4912건)가 만족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행정심판 평균재결 기간은 '21년에 비해 감소(81.5일 → 75.8일)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은 시정권고·인용 재결 등의 결과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특성상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

(4) 향후 개선사항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부패방지 정책·제도를 재정비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과소평가된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지속적인 국내외 홍보 추진
 - 각급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등 반부패정책 협력체계와 공직자의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향상을 지원
- 반부패 행위규범을 생활 속 규범으로 내재화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운영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 보완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기준 등을 담은 2023업무편람을 배포하는 한편, 공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 공직자의 청렴교육 적극 지원
 - 기존 비대면 온라인 방식 위주의 청렴교육을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 운영하여 교육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강화
 - 공직유형별로 차별화된 학습관리시스템(나라배움터, 청렴배움터)을 운영하고, 코스웨어 공동활용 등 기관 협업을 통해 자체 청렴교육 지원

-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 반부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공공재정 부정수급 총괄 관리기능 강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관리 점검 및 후속점검,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및 보조금 누수 방지 강화
 - 체계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정수급·환수 정보의 대국민 공개 추진
- 공공분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채용 정착 및 법령 속 부패요인 제거
 - 17개 광역시·도 및 61개 자치구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분석·검토하여 토착비리, 불공정 등 각종 부패유발요인 개선
 - 행정기관 비공무원 대상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채용 기준 이행점검’을 통해 공정채용 관리체계 마련

[국민고충 적극 해결을 통한 국민권의 보호 강화]

- 행정의 최종 AS기관으로서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및 소외지역과 민원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를 통한 현장 활동 강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조정·합의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
- 한 번에 편리하게 정부 관련 민원 상담·처리
 - 복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근본적 민원 해결을 도모
 -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보호를 위한 외부힐링(심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여 종국적으로 상담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국민 중심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
-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

○ 국민 중심의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설문조사의 대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패널' 규모 확대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소통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1,100여개인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안이슈를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예보 서비스 제공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국민생각함 등을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 법령 제도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이 일선 실무행정과 국민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노력

⇒ 국가청렴도·권익행정 만족도는 일부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향상시킬 수 없고, 위원회의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 총지출	908	834	928	885	20	51
○ 총계	908	834	928	885	20	51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478	433	471	450	-8	18
○ 기본경비	73	65	78	70	5	6
○ 주요사업비	358	337	379	364	22	27
□ 예산계 (A)						
○ 총지출	908	834	928	885	20	51
○ 총계	908	834	928	885	20	51
【일반회계】						
- 총지출	908	834	928	885	20	51
- 총계	908	834	928	885	20	51

별첨2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908	834	928	885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269	250	292	278
	정보화	89	87	88	86
	R&D	0	0	0	0
	소계(A)	358	337	379	364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478	433	471	450
	기본경비	73	65	78	70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51	497	549	520

○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소관	기금명	'21년		'22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1	1	2 100.0%	-	-	2 100.0%	98.4%

2. 성과지표 유형별 실적 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합계
	0	0	0	2	2
초과달성	0 0.0%	0 0.0%	0 0.0%	0 0.0%	0 0.0%
달성	0 0.0%	0 0.0%	0 0.0%	0 0.0%	0 0.0%
미달성	0 0.0%	0 0.0%	0 0.0%	2 100.0%	2 100.0%
미달성 지표의 달성률 평균	0.0%	0.0%	0.0%	98.4%	98.4%

3.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 목표 :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① 국가청렴도(CPI) (점)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1.0	62.0	64.0
				실적	61.0	62.0	63.0
				달성률	100.0%	100.0%	98.4%
	② 권익행정 만족도 (점)	결과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73.8	74.2	74.5
				실적	74.4	74.8	73.3
				달성률	100.8%	100.8%	98.4%

별첨4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2년 예산	'22년 결산	집행률
총 계					379	364	96.1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379	364	96.1
프로그램목표 I-1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379	364	96.1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9	19	98.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88	86	98.4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2	10	84.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13	106	94.4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	13	98.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24	119	96.3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	11	98.4

별첨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2예산	22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	100	인건비(대상)	47,062	45,008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 (대상)	3,123	2,796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675	4,23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31	청렴권익문화확산	1	30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941	1,913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2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2	320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640	5,584	I-1-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2		2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112	3,026	I-1-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3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3	331	반부패기술지원 (ODA)	168	162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3		3	332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263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3		3	333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588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4	부패·고충제도개선 및국민소통 활성화	2	340	부패·고충제도개선	97	90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4		2	341	종합상담창구운영	11,169	10,547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10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8	360	청렴도측정및부패 영향평가	2,507	2,377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592	2,473	I-1-재정	

회 계	계 정	분 야	부 문	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2예산	22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36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8	3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69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002	2,999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5	공익신고제도운영	2,805	2,801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6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727	659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7	청탁금지제도운영	344	236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6		8	368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96	286	I-1-재정	
11	0	010	016	1100		9	1137	행정심판	1	370	행정심판운영	1,083	1,065	I-1-재정	
합계												92,793	88,484	-	-
					<일반회계>합계	총 세부사업수		21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8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전체 합계	총 세부사업수		21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8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별첨6

2022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 프로그램 목표 수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과제번호)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지표 분야	수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 I-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I-1)	37,040	36,892	권익행정 만족도	0.5	권익행정 만족도	0.5	74.5	74.5	일반 재정	<변경사항 없음>
	37,040	36,892	국가청렴도(CPI)	0.5	국가청렴도(CPI)	0.5	64.0	64.0	일반 재정	<변경사항 없음>

2. 보조사업 수정 현황

프로그램명 (과제코드)	세부사업	예산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수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해당사항 없음								

별첨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프로그램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22년 목표치	'22년 실적치	'22년 달성률
국민권익증진 (1-1)	청렴권익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 산술평균 (100점 만점)	87.3	88.1	100.9